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7.4 공동성명에서 6.15 공동선언으로

기 세 문

(이사, 민자통 광주전남의장)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겨레가 감격하여 환희에 넘쳤던 역사적 대사변이 대역섯 번 있었다. 맨 처음은 1945년 8.15 해방인데 일본의 패망과 조국광복,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우리글과 우리 노래와 우리 역사를 처음 배우는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다음은 1950년 6.25 때다. 8.15 해방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고민해야 했던 순진한 청소년기에 또다시 천지개벽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도 순간처럼 지나가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외국군대에 짓밟히고 피로 물들었다.

그 다음은 4월혁명이다. 그때 우리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시민 청년학생들과 함께 4월혁명의 물결 속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춤을 추고 싶은 감격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민주주의의 4월혁명을 무참히 짓밟게 버렸다.

네 번째는 7.4 남북공동성명이다. 1972년, 전쟁이 곧 터질 것처럼 온 사회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던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남북화해와 단결의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정희는 6.23 선언으로 배신하고 유신독재체제로 전변하였으며, 형무소의 비전향 특사에서는 살인적인 전향공작으로 인한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희생과 강제 전향이 있었다.

1979년 김재규의 총격에 의한 박정희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으로 탄압 받은 수많은 운동가들에게 통쾌한 쾌거였으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군사정권이 계속 되고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학살 만행으로 역사는 다시 얼어붙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은 또다시 6월항쟁으로 폭발하여 전두

환 군사정권의 퇴진과 노태우, 김영삼의 기만적 집권 등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마침내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 6.13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7천만 전 민족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기억을 새롭게 해보면, 7.4 남북공동성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로서 당시 악명 높았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여(1972.5.2~5.5) 북(조선)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만나 회담하고 같은 해 북(조선)의 박성철 부수상이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하여(1972.5.29~6.1) 이후락 정보부장과 회담하여 이루어낸 결과다.

7.4 공동성명의 핵심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은 자주적 통일, 무력행사를 하지 않은 평화적 통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하는 조국통일 3원칙이다. 이밖에 남북간의 중상비방 중지, 남북교류, 남북적십자 회담, 서울-평양 사이의 직통전화 설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약속한다는 성명을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그 후 1991년 12월에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하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할 것임을 국무총리 정원식과 정무원 총리 연형묵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남북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는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공문서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재야 운동권의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1988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1989년에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유럽, 북미주, 일본 지역에서 결성되었다.

1990년에는 ‘8.15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1차 실무회담과 베를린에서 해외와 북측 대표들이 참가하여 판문점에서 ‘8.15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남측은 당국의 방해로 참가하지 못하고 황석영씨가 남측을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며, 이 범민족회의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곧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유럽, 일본, 북미주, 북측 본부가 결성되고, ‘범민련 남측 본부’는 1991년 2월에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는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199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었으며, 그 동안 ‘범민련 남측 본부’의 지도부는 범민련 내부의 ‘범민련 해체론’(새 통일

운동단체론)과 좌우경적 편향, 분열분파주의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당국의 갖은 탄압과 맞서 싸우면서 10여 년의 오랜 세월 범민련을 지켜왔다.

한편 북측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 그리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을 발표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전날의 ‘7.4 공동성명서’나 ‘남북합의서’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며, 그 이행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첫째로 6.15 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에 더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6.15 공동선언에서 ‘연합제 안’과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북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도 새로운 진전이다. 이 방안은 결론적으로는 1국가 1민족 2체제의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제기되는 현실문제는, 이와 같이 6.15 공동선언대로 한다면, 남녘의 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분단의 원죄인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북조선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는 지난번 1차 송환에서 가지 못한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답방(서울 방문)을 실현하려면, 먼저 손님 초청한 쪽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와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녘의 사회적 환경, 수구보수세력들의 반복·반통일적 언동이 활개치는 서울의 분위기라면 어떻게 서울 답방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6.15 공동선언에는 인도주의 문제와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이어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북(조선)의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선결 문제는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를 해제하는 것이다. 북(조선)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하여, 유례없는 경제곤란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은 10여 년에 걸친 역사상 최악의 수재 한해(가뭄), 냉해의 연속된 자연재해와, 미국의 철저한 경제 봉쇄정책 그리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대결하는 과도한 군비지출 때문이다. 미국은 북(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무기 수출을 비롯한 수출통제와 무역제재

등 경제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은 북에 대한 차관억제, 전략품목조달 방해, 석유 쌀 수입 억제 등 철저한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량 살상무기 보유 등 허위 조작한 이유를 들어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 정권이, 북핵 문제를 트집 잡아 대북 선제공격의 위협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선군 정치의 기치 아래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있으니 그 군사비 지출이 얼마이며, 그로 인한 인민경제생활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크에서 곤경을 치르고 있는 부시가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대북강경책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인 바와 같이, 앞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아무튼 북(조선)의 경제는 머지않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조선)경제에 희망이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1998년 북(조선)을 방문하고 온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지금 기름 위에 등등 떠 있다.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남측에 공급하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했다”는 말, 그리고 호주의 페트렉스사 기술고문(최동룡 박사)의 말도 중요하다. “서해지구에만도 수십 억 배럴의 원유가 있다... 21세기 초에 생산이 가능하다... 남포의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물리 탐사를 끝냈는데 매장량은 P광구에만도 30억 배럴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라면 2010년경이 될지 그 시점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세계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종합한 결론으로서 미국의 패권시대가 21세기 중반에는 사양기에 접어들 것이며, 그 이전에 중국이 도약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북 민족의 비약이 더 앞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우리 남북이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공조하며 비약적 발전을 할 날이 멀지 않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낙관해도 좋을 것이다.

사월혁명회보 제73호(2004.7)